

농축산소식

ASG 18개 품목 무관세쿼터 허용, 한·미 FTA 협정문 공개

정부가 지난 5월 2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과 부속서 전문을 공개하면서 농산물분야의 경우 세이프가드(SG)를 1회만 발동토록 제한돼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과 함께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ASG) 적용품목에 대해 무관세쿼터를 허용한 것에 대한 논란이 야기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SG는 모든 상품에 적용되는 양자 SG와 ASG가 있다"면서 "농산물도 원칙적으로 양자 SG 적용대상이나 농산물 중 관세 철폐로 수입 급증 가능성이 높은 것은 별도로 ASG를 적용토록 했으며, ASG에는 발동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ASG 적용대상품목인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등 30개(HS 10단위 75개) 농산물은 수입량이 연도별 발동기준물량을 초과하면 자동적으로 발동돼 연말까지 유지되고 매년 발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양자 SG는 동일품목에 대해 1회만 발동가능하고 2년까지 조치가 가능하며, 필요시 1년 연장이 가능하나 ASG는 발동 회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ASG 적용 농산물은 쇠고기, 돼지고기, 마늘, 양파, 고추, 녹두·팥, 고구마, 서류, 사과, 녹차, 생강, 맥주맥·맥아, 보리, 옥수수(팝콘용), 옥수수(가공용), 메밀·기타곡물, 기타가공곡물, 감자분·플레이크, 옥수수전분, 감자전분, 메니옥전분, 고구마전분, 기타전분, 낙화생, 참깨, 참기름, 인삼, 설탕, 발효주정, 변성전분 등 30개 품목이다. 이들 품목은 ASG 발동 후 60일 이내에 미국에 서면으로 발동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민통서 농림부 통상정책관은 지난 5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세이프가드는 기본적으로 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수입농산물 급증 시 국내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이므로 발동을 안 할수록 좋은 것"이라며 "특히 오렌지의 경우 우리에게

민감한 품목이므로 ASG 적용대상이 아닌 성출하기에 현행관세가 유지되는 계절관세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OE, 미국 '광우병 위험통제국' 판정

국제수역사무국(OIE)은 지난 5월 22일 미국과 캐나다 등을 광우병(BSE) 위험통제국으로 판정, 소의 월령에 관계없이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고있는 국제수역사무국 전문위원회는 지난 5월 22일 오후에 열린 회의에서 이들 국가의 광우병 위험등급을 '통제된 위험(Controlled risk)'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베르나르 발라 OIE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문가그룹의 잠정 평가안대로 미국과 캐나다, 칠레, 대만, 스위스, 브라질 등 6개국을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결정했다"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BSE 위험 통제국 결정에 반대한 회원국이 없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쇠고기가 월령에 관계없이 수출이 가능해 짐에 따라 OIE의 결정을 근거로 갈비와 사골 등 뼈있는 쇠고기에 대해서도 수입확대 압력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같은 결정에 우리측은 이미 미국이 특정위험부위(SRM)를 폐기하지 않고 비반추동물의 사료로 사용해 교차 오염의 우려가 있다는 점과 미국의 광우병 예찰 시스템이 약하다는 등의 문제 제기를 하며 광우병 관리시스템의 경우 현지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결코 국제수역사무국 판단 인정 못해

국제수역사무국(OIE)가 미국을 광우병 '통제 가능국'으로 분류한데 대해 결코 인정할 수 없다. 프랑스 원정 투쟁단은 지난 5월 25일 파리 OIE 총회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을 광우병 '통제 가능국'으로 분류한 결정에 대해 인간과 동물의 건강 및 안

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을 강력히 경고했다.

비록 미국이 광우병 위험 통제국이라는 면죄부를 받았으나 결코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이번 결정으로 OIE는 인간과 동물의 건강을 지키는 기구가 아니라 다국적 축산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꼭두각시임을 만천하에 증명하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OIE가 미국을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판정했더라도 진실은 변하지 않으며 이번 결정은 전 세계의 사람들을 광우병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원정투쟁단은 한국으로 귀국길에 올랐으며 한미 FTA와 함께 한 EU FTA 저지를 위해 함께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한·EU FTA’ 한국축산농가 반대 입장 표명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고 있는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 원정투쟁이 이슈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의회에서 한·EU FTA에 대한 한국축산농가와 EU 농민단체가 공동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지난 5월 22일 유럽의회(프랑스 스타라스부르)에서 한·EU FTA를 반대하는 유럽의회 의원, 현지 농민단체와 함께 한 EU FTA반대 공동기자회견에 한국축산농가 대표로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FTA 등 자유무역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카스페리 글로벌 유럽보고서(The Caspary 'Global Europe' report)가 의회에서 투표처리 된 직후에 이를 반대하는 유럽 의회의원과 농민단체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승호 회장은 한미 FTA 타결을 시작으로, 한EU FTA 협상개시 소식을 접하면서 한국의 축산농가들은 심각한 공황상태에 빠져 있다고 밝히면서, 특히 EU가 협상목표로 삼고 있는 축산업 특히 낙농산업

과 양돈산업은 일대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며, EU 의원, 농민단체들에게 공동투쟁으로 한EU FTA를 중단시켜 전세계 식량주권과 농민의 생존권을 지켜 내자고 제안하였다.

또한 한EU FTA를 반대하는 유럽의회 의원(프랑스, 스웨덴의원 3명), EU 농민단체 대표들은 지금 세계가 기상이변으로 식량위기가 가속화 되고 있고 식량안보, 환경보전, 사회문화적 기능 등 농업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이 외면받고 있다며, FTA를 통한 무역자유화로 그 어떠한 나라의 농업도 존립할 수 없다며 앞으로 한국 농민단체들과 연대하여 FTA저지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미산 쇠고기 수입 거센압력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가 미국과 캐나다 등 6개 국가를 광우병 위험통제국가로 평가함에 따라 미국의 쇠고기 수입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한우업계는 힘의 논리에 의한 불합리한 결정에기가 막히다는 반응이다. 미국은 OIE결정이 내려진 이후 자축파티를 열며 안전성이 검증된 미국 쇠고기의 한국 검역조건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FTA(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을 반대하고 WTO(세계무역기구)에도 제소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노골적으로 검역조건 개정을 요구했다. 미국 내 주요 쇠고기 패커들도 한국 수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수입관련 업체들은 “많은 업체들이 쇠고기 수입을 위해 이미 미국으로 떠났거나 출장을 계획 중”이라며 “그동안 움직임이 없던 미국 내 대형 패커들도 한국수출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한 냉장업체 관계자는 “6월 말부터 배편으로 상당한 양의 쇠고기가 들어올 것으로 보이나 전량이 이물검출기를 통과해야하는 현 위생조건 상 국내 쇠고기 가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갈비수입이 허용될 것으로 보

농축산소식

이는 8월말이나 9월께쯤 쇠고기 시장에 변화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HACCP 지정사업장 사후관리 미흡

HACCP를 지정받은 사업장의 대부분이 HACCP 도입 사업장으로 지정받은 이후 사후관리에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물HACCP기준원(원장 곽형근)에 따르면 그동안 HACCP 지정 받은 작업장에 대해 지난 2006년 11월 1일부터 2007년 4월 30일까지 사후관리 평가를 실시한 결과 보완조치가 필요한 작업장이 무려 88.2%나 되는데 부적합 판정도 2.9%로 드러났다.

고작 8.0% 정도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 HACCP 지정 사업장의 사후관리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식육포장처리업과 식육가공업 분야에서 보완조치가 가장 많이 요구된 것으로 나타나 위생에 대한 보다 철저한 개념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기준원은 이같은 결과에 따라 기술상담센터 운영을 보다 더 활성화시킴으로써 사후관리라든가 HACCP 적용 현장 애로사항 등에 대한 상담을 통해 사후관리에도 사업장 스스로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축세 폐지, 그만큼 경쟁력 높아져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남호경)는 지난 5월 29일 농림부 윤기호 축산물위생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쇠고기 이력제 등 축산관련 법률 개정 추진내용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윤 과장은 소 개체식별관리를 위한 법률 개정이 한미 FTA 대책의 일환으로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6월 정기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확대는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의원입법과 시행령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도축세 폐지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김영덕 의원 발의로 행사위에 계류중에 있으며 대체재원 마련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행사위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에게 당위성을 설명하고 행사위 위원 전체에 대한 설명도 필요한 상황이다. 재량행위 투명화 등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축산물 HACCP 기준원 특수법 인화와 유효기간제 도입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남호경 회장은 과거 포도에 대한 폐업보상금을 지원했으나 실질적으로는 포도 재배면적이 증가했다며 이 같은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농림부 실무자들이 현장감 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협회 등 단체와의 긴밀한 관계 유지 등에 좀 더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은 육우가 수입육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농협의 하나로 마트에 육우매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고등학교, 학교우유급식을 늘려

우유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중·고등학교 우유 급식률이 크게 늘어났다.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 2006년 학교 우유 급식은 초등학교가 3백77만명으로 전년 대비 0.9%증가에 그쳤으나 중학교는 43만3천명으로 전년 대비 2% 상승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는 28만5천명으로 전년 대비 무려 9%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학교우유 급식이 고학년으로 갈수록 우유 급식을 기피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었음을 감안할 때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처럼 고등학교의 우유 급식이 늘어난 것은 낙농업계의 학교급식을 확대를 위한 전방위 노력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학교우유급식확대추진협의회를 결성, 학부모

교사아카데미, 학교우유급식담당 지자체 및 관계기관 합동연찬회 등의 구체적인 노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농협, 신성장 사업 14개 확정

농협 축산경제가 최근 한·미 FTA 등 개방화가 가속화되면서 겪게 될 축산농가들의 권익과 한국 축산업의 미래를 위해 청사진을 확정하고 현실화 작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축산경제는 지난 3월 16일부터 2개월간 전체부서의 실무자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한 후 워크숍 등을 통해 현실 가능하고, 시급한 신사업 14개의 중점사업을 확정하고 부서별로 실행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14개 사업은 축산물 유통부문이 9개, 생산부문이 5개로 유통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됐으며, 가속화되고 있는 개방에 따라 붓물터지듯 유입되는 외국산 축산물과의 경쟁에서 이겨내려면 유통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음을 그대로 입증했다.

한편 남경우 축산경제대표는 부서장들에게 14개 신성장사업 과제들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과는 별도로 그 추진상황을 월별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아지 생산안정 기준가격 인상

송아지생산안정기준가격이 현행보다 25만원 인상, 155만원으로 확정됐다.

농림부는 한·미 FTA타결 이후 한우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등 불안정한 한우시장 안정을 위해 '송아지 생산안정 기준가격'을 25만원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송아지경영비, 자가노력비,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해 한우농가의 불안심리를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결정됐다. 또 송아지 거래가격이 안정기준 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기준가격의 20% 수준에서 그 차액을 보전하는 '보전금 지급 한도액'

도 기준가격 인상에 따라 현행 26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했다.

한편 송아지 가격은 지난 1월 255만원하던데서 5월 16일 현재 211만원으로 하락했으며 가격 인상 발표 직후인 21일 현재 216만원을 기록, 상승세로 돌아섰다.

광우병 쇠고기 관련 3개 개정법안 발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모든 식당으로 확대하고 동물성 사료를 먹인 쇠고기를 유통,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강기갑 의원 등 19명의 국회의원들은 지난 5월 17일 이와 관련한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일부개정법률안, 사료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발의된 법률안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모든 식당과 집단·학교급식소로 확대시키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도 관리감독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로부터 유래된 식재료 사용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동물성사료를 먹인 쇠고기는 판매와 유통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배합사료값 인상 인상폭 6% 내외

배합사료가격이 또 인상됐다. 인상폭은 6% 내외로 kg당 20원에서 25원 사이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제 옥수수가격이 사상 최고치인 톤당 230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해상운임비도 상승해 가격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각 업체들은 이에 따라 이달 하순경부터 배합사료 가격을 kg당 20원에서 25원 정도씩 가격을 인상키로 했다.

자돈 사료의 경우 유당 가격으로 kg당 100원 내외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자료출처 : 축산신문, 농수축산신문, 라이브뉴스〉